

# 세계경제의 변화와 노동운동

박 영 삼(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 1. 들어가면서

그 동안 국제노동운동은 80년대 이후 불황과 국제적인 자본이동, 그리고 신보수주의적인 노동억압 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선진국 노동조합들은 실업과 불안정고용의 증가로 인한 조직력의 약화, 노동조합에 대해 공격적인 보수 정치세력의 집권과 노·사·정 3자주의(tripartitism)의 후퇴로 어려움을 겪었고,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노동조합들은 초국적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자국 정부에 의해 노동권 억압과 노동력가격의 하향 경쟁에 내몰려 왔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992년 이후 세계경제가 점진적인 성장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까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장주의에 기반한 각국 자본의 경쟁적이고 투기적인 활동은 정부의 필수적이고도 긴요한 조절행위조차 거부하면서 노동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자칫하면 노동자의 조직적인 보루인 노동조합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의 노동조합운동은 세계적 보수주의를 역류하여 오히려 강력한 전진과정에 있다. 이 흐름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밑으로부터의 조합원대중의 지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별노조주의로의 강력한 흐름과 대단결주의, 그리고 민주노총의 활동 개시는,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주목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것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다면 이제는 노동조합운동이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별기업의 경영 분석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거시적으로 계급적 안목을 가지고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이론이 전문가들의 머리에서 노동자대중의 직관으로 넘어오기에는 아직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완벽하고 정밀한 이론을 추구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동과 자본의 타협과 갈등의 역사를 노동의 입장에서 훑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시중의 온갖 담론들을 압도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가 어떤 계급적인 역관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를 이해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 이 시기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하는 지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국제분업과 계급타협의 시대(1945 - 1970년대 중반)

제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승리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련을 중심으로한 사회주의 블록의 탄생이라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또한 종전후의 폐허를 딛고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전쟁으로 억눌려 있던 노동조합과 이에 제휴한 정치세력들이었다. 반면에 정부와 자본가들은 전쟁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여기에 제국주의 시대의 주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었던 식민지체제는 결국 붕괴하고 말았다. 신생독립국들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본주의 강대국보다는 코민테른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다. 사면초가에 빠진 자본주의 진영은 타협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국제관계에 있어서 무역과 통화제도에 관한 각국간의 합의가 필수적이었다.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IMF(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세계무역질서와, 달러화를 기축으로한 국제통화질서의 표현이었다. 이 기구들을 통해 자본주의 진영은 사회주의권에 대응하는 국제분업과 교역의 확대를 추구하고, 신생독립국들과 개도국들을 점점 세계경제의 분업구조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민족주의적 경향과 사회주의로의 편입을 제어하는 정책을 펴나갈 수 있었다. 이 구도는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장기변영을 구가하던 7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비록 각국의 국내산업 육성 정책이 보호관세를 낳았지만, 8차에 걸친 GATT의 라운드를 통해 관세인하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 부분적으로는 자본수출을 통해 무역장벽을 회피할 수도 있었다. 또한 선진국들은 남아도는 과잉자본을 저개발국가에 대부해 주고, 저개발국들은 그 자금으로 선진국의 상품과 설비를 구입, 값싼 공산품을 제조하여 다시 이것을 선진국 시장에 되팔 수 있었다. 우리 나라도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정권에 의해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차관을 도입하여 국가가 직접 배분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선진국들은 사실상 빌려준 것보다는 환

원 더많은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sup>1)</sup>

선진국에서 호황이 계속되었던 이 시기는 국내적으로도 계급간의 타협이 지속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전략을 일부 포기하였고, 선진국의 각국 정부도 좌, 우파를 불문하고 완전고용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노조 활동의 자유와 규칙적인 임금인상, 복지서비스를 약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개발국가에서는 권위주의 정부의 억압적인 통치형태가 일반화되면서 물리적인 억압을 통해 계급간의 갈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를 만한 이 시기에 보편적인 경제정책의 원리로 받아들여진 것은 케인즈의 국가개입주의적 경제이론이었다. 요컨대 자본주의 시장은 그냥 내버려두면 공황과 실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써서 인위적으로 경기변동과 '시장의 실패'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업의 원인은, 임금이 너무 높아서이기보다는 투자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으므로, 국가가 투자를 확대하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파동을 겪어야 했지만, 생산과 교역의 확대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실패와 갈등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방향 자체를 바꾸게 하지는 못했다.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민간자본의 축적이 미미하고 경제적 빈곤으로 시장수요 자체가 저조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적인 기능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자본, 노동, 기술이 거의 대부분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이 채택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후진국형 케인즈주의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1) 1960년까지만 해도 선진국은 저개발국으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의 31배, 화학제품의 9배, 철강의 7배, 기계제품의 6배나 되는 양을 저개발국에 판매했다. 상당량의 외채는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재 또는 소비재를 수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되었고, 원리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능력적으로 제공되는 외채가 또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생산적인 투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권력자와 부유층들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데도 많은 부분이 사용되었다. 결국 몇몇 나라에서만 -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채가 생산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무자들은 외채상환에 필요한 달러를 얻기 위해 수출산업에서 극도의 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이렇게 해서 선진국으로 수입된 값싼 소비재들은 선진국 정부로 하여금 실질임금 인상의 압박을 덜어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낳았다(김수행 역,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 동아출판사, 1992, p. 415).

2) 선진국의 케인즈주의가 조직노동과의 타협을 기초로 한다면, 제3세계의 케인즈 주의는 조직노동에 대한 강요된 협조(또는 배제)를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5.16쿠데타 직후 현재의 한국노총의 모태가 되는 '노조조직개선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주도하려고 한 이유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 3. 위기와 탈출구, 노동을 공격하라!(70년대 위기 - 80년대)

그러나 70년대 중반의 위기와 국제적 공황은 전후 황금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였다.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전제로 한 국제 무역질서와 국제 통화신용체제는, 미국의 쇠퇴와 독일과 일본의 부상 등 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으로 붕괴되어 나갔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 사이에도 불균등 발전이 심화되었다. 소련과 중국에 대항하는 아시아의 자본주의 거점이었던 한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계속한 반면,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은 외채에 허덕이면서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1982년 멕시코의 충격적인 '외채상환 불능선언'으로 시작된 이 지역의 외채위기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긴장은 물론, 선진국 내부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공생관계에도 균열을 가져 왔다.<sup>3)</sup> 노사관계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평조합원들의 불만으로 터져나온 파업의 물결이 전 유럽을 흔들어 놓았다.<sup>4)</sup> 선진국간의 협조, 국제분업을 통한 남북의 의존성, 복지국가 속에서의 계급타협 등, 전후의 안정기조는 선진국간의 경제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등장, 저개발국들의 심각한 불균형, 보수주의의 등장 등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공황이 지체되어 왔다는데 있었다. 자본이 과잉축적되고 이윤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황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자본들은 생산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이윤량의 증대로 이윤율의 추소를 매워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황으로 이윤실현이 어려워지자 자본의 축적 전략은 다시금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대처와 레이션으로 대표되는 80년대의 신 보수주의는 노동자들을 그들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개입의 철폐와 완전한 시장적 자유를 내세운 이들의 '신자유주의'<sup>5)</sup>는 실천강령의 모든 곳에 노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표방했다.

3) 위기가 촉발되기 전까지는 초국적은행과 저개발국의 정부, 선진국의 산업자본은 일종의 국제적인 파업자본 유통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면 저개발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을 결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채를 갚을 수 없게 되자 은행은 더이상 돈을 빌려줄 수가 없었고, 따라서 이들 나라에 물건도 팔 수 없게 되었다.

4) 1968-70년의 유럽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투적인 파업은 인플레이션적인 성장구조 속에서 찾아온 경기후퇴와 임금억제에 목적을 둔 정부의 긴축적인 소득정책, 그리고 여기에 협조한 노동운동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이 결합된 것이었다. 이 때의 싸움은 노동자들의 승리로 귀결되는데 여기에는 완전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조건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대결은 보수파와 자본의 승리로 판가름이 났다. 그들은 대량해고를 공격무기로 사용하였다.

5)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18세기에 세계를 발흥한, 자본주의 공업을 대표하는 영국의 부르주아지들이 중앙 집중적인 국가의 봉건적인 토지귀족, 특권적인 식민지회사에 대한 독점적

정부지출의 축소, 세금인하, 국영기업의 사유화(민영화)<sup>6)</sup>,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그들의 주요 정책이었다. 정부가 돈을 아끼기 위해 제일 먼저 삭감한 것은 연금과 실업수당, 그리고 공무원의 숫자와 그들의 봉급이었다.<sup>7)</sup> 부자들과 기업의 세금은 대폭 줄었지만 노동자들은 조세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세로 전가된 더욱 많은 세금을 물어야만 했다. 국영기업의 사유화는 대량해고와 노동조합의 파괴, 공공재의 가격인상을 초래했다.<sup>8)</sup> 해고의 요건과 비정규직(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완전고용은 더 이상 정부의 책임이 아니었다. 오히려 보수파들은 산업예비군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효과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보수파들은 이러한 '외곽 때리기'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도 주저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동관계법이 개악이 잇달았으며, 이에 저항하는 조직노동자를 때려서 패배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사용되었다.<sup>9)</sup> 오킨대 그들의 목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2차대전

---

인 특허와 보호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자본주의적 독점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노동조합'의 특수하고도 불가피한 독점 -노동력공급을 조절함으로써 노동력가격=임금을 결정하려는 순(順)시장기능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완전히 달리한다. 따라서 스스로 지칭하듯이, 마르크스주의나 케인주의와 같이 국가에 의한 의식적인 경제개입을 주장하는 급진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신보수주의'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이다.

6) 민영화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통상 우리 나라 사람들은 민(民)을 군(軍)과 대치시키는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고 하면 무언가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 개혁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된다. 기업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도 빠져 있다. privacy가 '국민생활'이 아니듯이 privation도 당연히 국유화, 사회화 개념과 대치되는 '사유화'라고 쓰는 것이 옳다. 단, 국민적 소유로 기업형태가 전환할 때에는 '민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7) 물론 신보수주의의 논리가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보수주의가 창렬하고 있는 것은 그 이론의 논리적인 정합성 때문이 아니라, 그것의 이데올로기적인 성격, 즉 자본과 노동의 문제에서 극단적인 자본옹호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훨씬 솔직하고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논리적인 정합성으로만 본다면, 오늘날 모든 경제이론은 좌우(左右)와 신규(新舊)를 막론하고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8) 민영화가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민영화 직전에 상수도회사에 대한 환경규제 철폐, 전기회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되었다. 아울러 민영화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9) 영국에서는 피케팅(노조가 파업불참자를 통제하는 행위)의 제한, 동조파업의 금지, 노조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의무 부과, 파업요건의 강화와 정치파업의 금지,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 요건 강화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탄광노조의 파업을 깨기 위해 30억 파운드 이상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노동에 대한 공격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파업요건이 강화되면서 파업의 평균적인 지지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노조의 교섭력과 권위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정치자금 규제조치가 발표되면서 대부분의 노조에서 과거보다 훨씬 압도적인 찬성(평균 84%)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다는 하면, 몇몇 노조는 정치자금 설치를 서두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보수주의의 전면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보수파들의 무차별공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결국 자본주의의 최종적인 소비자집단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했다. 실업자의 증가와 취업자의 실질임금 저하는 구매력의 감소로 나타났고 자본은 이윤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sup>10)</sup> 자국 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었지만, 그것은 선진국의 침체는 물론 저임금을 무기로 이들 시장에 의존하던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경기악화로 번져 세계적인 불황의 악순환을 불러왔을 뿐이었다.

#### 4. 80년대의 초국적기업 - 국가보다 큰 자본

그러나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경기변동은 자본의 폭력적 재편과정이기도 하다. 경쟁에서 탈락된 자본은 더욱 강력하고 집중된 독점에 의해서 구축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불황 하에서 더욱더 대규모화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의 존재는 이러한 재편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에서 노동계급의 세계적인 회생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본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70년대의 위기까지는 미국에서 주로 호황기의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유럽에 대한 자본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경제의 후퇴와 유럽과 일본의 부상에 따른 이들 자본의 대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선진국 상호간의 자본침투에 따른 초국적 독점자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되었고, 80년대 들어 경기하강 무역불균형을 회피하려는 각국의 보호무역정책과 지역주의 확산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sup>11)</sup>

초국적기업의 전세계 사회사의 매출액을 합친 국제 생산규모는, 1982년의 2.4조불 수준에서 1989년에는 4.4조불로 급증하여, 같은 기간 세계수출이 1.5조불에서 2.5조불로 증가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그 규모 면에서 세계수출을 능가하고 있을 뿐만

10) 노동계급의 구매력 저하를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비자신용의 창출, 즉 신용카드 등을 통한 중산층의 소비를 확대하는 경제기술이 발달해 왔다. 그러나 이 여파(Yuppie) 현상에 대한 환상은 그것이 결국은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앞당기는 단기치방전에 불과하다는 사실, 따라서 오늘의 작은 위기를 내일의 더 큰 위기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11) 보호무역주의적인 제도하에서는 자본수출을 통해 그 장애를 극복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더구나 보호관세가 존재하는 나라에 대한 자본수출은 보호관세를 만큼의 초과이윤을 획득하게 해준다.(윌퍼딩, 『금융자본론』, 김수행·김진엽 역(譯), 동아출판사, p434 참조.)

아니라,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의 경우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자회사가 이룩한 총매출은 같은 해 미국 GDP 규모의 약 23%에 이른다. 일본의 경우 12%, 독일 17%, 영국 44%인데 이는 2000년에 이르면 미국 25%, 일본 24%, 독일 24%, 영국 48%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1> 주요 선진국의 GDP와 비교한 초국적기업의 국제생산규모

국가	1976년	1990년	2000년
미국	20%	23%	25%
일본	9%	12%	24%
독일	10%	17%	24%
영국	38%	44%	48%
스위스	81%	81%	81%

또한 상당수의 초국적기업들의 매출액 규모는 이미 많은 나라들의 연간 GNP를 증가하고 있다.<sup>12)</sup> 이들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 투자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몇몇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초국적기업의 자본수출은 본국의 입장에서 보면 GDP와 고용, 자본소득의 감소이지만 자본수지와 GNP의 증대를 가져온다. 또한 자본유치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과 GDP, 자본소득의 증대이면서 잉여가치의 이전이 발생한다. 초국적기업들은 수만 명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었다가도 하루아침에 뺏을 수도 있으며, 수백만 명의 국유지를 사들일 수도 팔 수도 있다. 그들의 손이 닿기만 하면 은행과 주식시장은 폭발하는 용광로가 되었다가도 냉랭한 폐가로 변해 버리고 만다. 무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초국적기업들이야말로 최대의 수출업자이자 수입업자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관 관세장벽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했다. 자본활동에 대한 일체의 정부개입과 규제를 반대하는 신보수주의가 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그리고 중대한 갈등과 이유 있는 반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적인 독점자본, 초국적기업의 힘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권력은 점점 더 대자본의 영향력 아래로 종속되고 정부는 자본의 정책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권력 획득을 위한 돈, 돈을 지키기 위한 권력"(money to get power, power to protect money)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12) 1985년에 제너럴모터스(GM)는 스위스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품을 세계시장에 판매했으며, 75만2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GM의 종업원 숫자보다 인구가 적은 UN회원국이 65개국에 달한다.

<표 2> 세계 15대 초국적기업의 매출액과 비교국 GNP

순위	기업명	본사	매출액 (십억달러)*	비교국가	GNP* (십억달러)*
1	General Motors	미국	125	네델란드	125.3
2	Royal Dutch Shell	영국/네델란드	107	스웨덴	100.2
3	Exxon	미국	105	스위스	92.6
4	Ford Motor	미국	98	한국	83.1
5	IBM	미국	70	불가리아	72.0
6	도요다	미국	64	아르헨티나	63.1
7	IRI	일본	61	대만	60.2
8	British Petroleum	이탈리아	59	노르웨이	57.9
9	Mobil	영국	59	덴마크	57.1
10	General Electric	미국	58	핀란드	54.0
11	Daimler-Benz	미국	54	남아공	53.3
12	히타치	독일	50	알제리아	50.7
13	Fiat	일본	48	베네수엘라	49.6
14	삼성	이탈리아	45	이집트	46.5
15	Philip Morris	한국	44	유고	43.5

주 : \* 매출액은 1990년 기준, GNP는 1985년 기준임.  
 자료 : ICEF, 'A World Social Economy', 1992.

### 5. WTO의 출범

95년 1월 1일을 기해 공식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95년말 현재 110개 국가가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완료한 상태이며, 비준서를 제출하지 않은 19개국도 97년 1월까지의 회원국의 자격을 갖게 될 예정이다. 중국과 대만, 러시아, 그리고 구동구권의 28개국도 WTO에 가입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만약 이들이 모두 WTO체제로 편입될 경우, 바야흐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 작동하게 됨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WTO는 GATT의 관세인하를 통한 공산품의 자유무역 확대를 넘어서 상품과 기술, 서비스의 교역과 투자를 완전하게 자유화하고 여기에 장애가 되는 제반의 제도와 법률, 관행을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계를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적 블록이 상존하고 국가의 무역정책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단일시장을 형성하는데는 상당한 기간과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일시장의 형성과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이 속에서 경쟁의 전면화는 심각한 국가간, 자본간, 계급간의 불균형



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생산의 국제화와 무역의 개방화로 대표되는 경제적 지구화(globalization)는 넓게는 집중과 집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자본의 운동법칙<sup>13)</sup>이며, 좁게는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압박 속에서 한동안 '수정'을 강요당해왔던 세계자본주의가 더 이상의 타협을 거부하고 과감하게 본색을 드러내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를 아니다.

17세기의 해상무역 시대를 제패했던 네덜란드가 그랬듯이, 또한 최초의 자본주의적 대공업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했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엽의 영국이 그랬듯이, 그리고 20세기의 냉전과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주도해온 초강대국 미국의 헤게모니 속에서도 '자유로운 무역과 경쟁'은 언제나 강자의 슬로건이었다. 오늘날 다시금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경쟁에 관한 신화들도 초국적 독점자본들과 핵심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출범이후 '95년 10월까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된 17건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아직은 시장개방의 초기단계라 주로 농수산물과 1차원료의 교역을 둘러싼 분쟁들이 대부분이지만 여기에서도 상황의 일단은 확인되고 있다. 강대국에 저가상품을 판매하려는 저개발국들의 간간함을 쓰고 있는데 반해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스스로 자유무역을 주창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서비스와 자본시장의 개방화와 두드러질 경우에는 강대국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강력한 시장개방요구와 보복조치를 해울 것이 예상된다. 한국은 선진국가로부터 불공정무역국으로 제소된 유일한 개발도상국이 되었다.<sup>14)</sup>

## 6. 노동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날 자본주의는 비약적인 과학기술 발전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를 시차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또한 이에 힘입은 생산력의 발전은 스스로의 소비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는 기아와 빈곤, 현격한 부의 불평등이 상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경쟁이 미

13) 도시화(urbanization), 근대화(modern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가치실현의 범위를 국내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일련의 논리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14) 한번은 식품유통기한문제도 제소되었고(95년 5월에 해결), 또 한번은 수입농산물검사제도때문이었는 데 이 사건은 아직 미결상태이다.

래의 자원들을 고갈시켜 버릴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공공에 비유되는 초국적 독점자들은 파괴적인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위기를 확대해 가고 있다.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신보수주의로 대표되는 낡은 유행도 결국은 보다 강력한 지배, 보다 많은 소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 강대국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뒤늦은 개발국들은 이러한 팽창주의를 민족주의로 호도하기도 한다.<sup>15)</sup> 그러나 획기적인 세계경제의 구조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또는 아주 파괴적인 위기가 이 모든 성장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려 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세계경제가 전후와 같은 고율 성장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팽창주의의 무모한 전개는 극단적인 자기파괴를 불러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국의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운동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각국의 이민법을 모두 폐지시키고 자유로운 자본이동에 대응하는 자유로운 노동의 이동을 주장할 것인가? 그래서 전세계 노동자의 더 높은 임금과 사회복지를 약속하는 나라로 전세계노동자들이 몽땅 이주하는 운동을 통해서 공격적인 자본과 반노동 국가들을 하나씩 파산시켜 나갈 것인가?<sup>16)</sup> 아니면 초국적 독점자본에 대응하는 초국적 단일노동조합(Global One-union)을 결성해서 세계노동시장에 대해 독점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도 않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태어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또한 세계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정치적 틀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의 대안은 진정한 연대와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70-80년대의 불황기에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보여준 연대적인 전략과 실천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무분별한 성장주의에 반대하면서 불황이 불가피하다면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평등하게 나누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다.

요컨대 스웨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실업의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더 고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병원과 탁아소, 휴양시설 등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이

15)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단계에서는, 다시 말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육성관세가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한 단계에서는, 경제영역이 좁은 나라일수록 그만큼 더 강력하게 자유무역을 추구하려고 한다(힐퍼딩, 『금융자본론』, 김수행·김진영 공역, 새날, 1992, p.437).

16) 월러스타인은 『반세계운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완전히 자유로운 이민의 허용이야말로 가장 평등적이고 진보적인 슬로건이 아닐까?"

용할 수 있는 공공복지 시설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한 시설들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설들을 만들고 운영하자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결국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되었다. 스웨덴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조금씩 아끼기로 했다. 물건을 소비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쾌락을 자제하는 대신 단축된 노동시간으로 여가를 찾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과 함께 향유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결단에 기업과 자산계급은 끌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정치적, 도덕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자 정부 하에서 스웨덴 노동자들이 높은 사회적 연대의식과 집단적인 규율을 통해 파괴적인 경쟁을 통하지 않고도 평등과 공존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스웨덴의 성공조차 끈질긴 경쟁의 압력 앞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유럽에서 노동운동이 힘을 잃어가고 각국의 정부가 보수적인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한 나라가 버틸 수 있는 힘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웨덴의 모델을 일반화시켜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보다 강력해질수록, 그리고 노동자계급 내부의 연대와 결속이 보다 확고해질수록 보다 평화롭고 호혜로운 세계를 앞당기는 길이 희망적이라고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노동운동이 우선 자신의 나라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서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운동간의 진정한 국제연대를 확장해 가는 것도 긴급하고도 현실적인 과제라고 하겠다.<sup>17)</sup>■

17) 그러나 현재의 국제자유노련(ICFTU)와 국제산별조직들(ITSs)은 지나치게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최근 브라질과 남아공 등 제3세계의 진보적인 노동조합들과 이에 공감하는 유럽노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노동운동'(NILM)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흐름이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얻어 나간다면 노동운동의 국제적인 연대가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